김문수 의원 "전남 의대, 목포·순천대 빠른 통합 우선"

빠른 개교 '선결 조건' 주문
"받을 곳 있어야 정원 배정"
예비인증 기간단축도 강조

교육부가 신설될 전남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전남도의 목표(2027년)보다 3년 늦은 2030년으로 제시한 가운데 개교 시기를 앞당기려면 무엇보다 순천대와 목포대의 조속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교육위)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가 "(전남 의대 신설을 위한) 교육부 계획을 조금 앞당길 방안이 없겠느냐"고 묻자 목포대와 순천대의 빠른 통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생 배정을 받고, 교육부로부터 배정을 받으려면 통합해야 한다"며 "받을 곳이 있어야 배정해 주지 않겠냐. 다른 모든 조건에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두 대학 간의 통합이다"고 말했다.

이어 "받을 주체가 없으면 배정을 안 해준다. 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곧 시작될 텐데 대상이 되려면 통합해 놓고 배정받아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본보가 최근 확인한 교육부의 '의대 신설 주요 절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하고, 신설 의대 지역과 정원 규모를 정한다. 이어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복지부 배정 원칙(신설 여부,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해 신설 의대 대학을 선정한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의사인력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에 전남은 특정 대학이 아닌 '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통합을 전제로 정원 배정을 요구하는 전남의 주장에 다른 지역이 형평성을 문제 삼을 수 있어 두 대학의 조속한 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또 한국의약교육평가원(의평원) 예비 인증 기간 단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교수 확충 등 준비를 대학에서 미리 해두면 예비 인증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의대 신설 절차를 이행할 주체는 복지부, 교육부, 의대 신설 대학(통합대학)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와 교육부는 전남도와 정치권이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개입 여지는 크지 않다. 반면 의대 신설을 위해 통합 대학은 교원·기자재·부속병원 확보 등에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 협조를 통한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남 도민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목포대와 순천대의 조속한 통합이 필요하다"며 "두 대학이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준비위원회 발족 전남도가 지난 6일 해남군청에서 오는 10월 예정된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의회 "국립의대 2030년 개교 계획 철회를"

"도민 생명·건강권 외면"
특별법 등 2027년 촉구

전남도의회 통합대학교 국립 의과대학 설립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교육부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2030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도민들은 수십년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불필요한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2030년 개교 계획은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외면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는 도민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드시 의과대학을 신설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정부와 국회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2027년 3월 개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남도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통합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교육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개교 예상 시기를 2030년으로 제시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민 2명 중 1명 'AI 선도도시' 기대감

광주연, 수요자 여론조사
"교통·에너지 우선 적용을"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과제로 선언한 가운데 광주시민 절반은 광주의 AI 선도도시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 10명 중 8명은 AI 사용 경험이 있고, 실제 도시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예상했다.

7일 광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25일 시민 605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와 고령층 면접 방식을 통해 '포용적 AI 대전환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광주가 AI 선도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54.5%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 79.2%는 AI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중 21.1%는 '생성형 AI를 거의 매일 사용중'이라고 답했다. 64%는 AI가 '도시 문제 해결'에, 73.2%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AI로 일자리가 줄고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적잖았다. '일자리 대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시민은 각각 76.6%와 71.1%에 달했으며, 창의성 감소·디지털 격차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시민체감형 서비스 개발에 적합한 분야(복수응답)로는 교통이 43.2%로 가장 높았고, 안전·치안 28.8%, 교육·학습 26.6%, 복지·돌봄 18.5%, 의료·헬스케어 18%, 환경 15.7%, 문화·여가 12.6%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AI 기술을 우선 적용해야 할 분야로는 에너지(30.2%)가 가장 많았고, 문화콘텐츠, 자동차, 헬스케어, 광산업이 2~5위를 차지했다.

한경록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AI 대전환'이라는 거대물결에 대한 기대감이 뚜렷했다"며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느끼고 접근하기 편하려면 체험과 교육, 홍보 3가지 요소가 잘 작동해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길용현 기자

신수정 시의장 "쓰레기 처리 위기, 행정 신뢰회복을"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지난 5일 "광주시는 지금 쓰레기 처리 위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폐기물 처리 행정의 신뢰 회복을 당부했다.

신 의장은 이날 제336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은 악취 민원으로 가동 중단 요구에 직면했고, 신규 소각장 건립은 주민 반발로 표류 중"이라며 "천문학적인 SRF 운영비 분쟁, 신규 소각장 부지의 위장전입 의혹과 절차적 논란까지 겹쳐 시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까지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아 하루 500t 넘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도 태우지도 못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며 "광주시는 입지선정 과정과 평가 자료, 환경 수치 등을 전면 공개하고 주민·전문가·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어 투명성과 참여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 승인,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광주여성가족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최지원 의원,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박필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길용현 기자

광주시, 문학상 후보자 22일까지 전국 공모

광주시는 7일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문화예술상 문학상' 후보자를 전국 공모한다"고 밝혔다.

박용철·김현승·정소파문학상으로 구분되며, 전자우편과 광주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소설 등 문학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이며 동일 공적일 경우 광주시 거주자를 우선 선정한다.

추천은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 총·학장, 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 만 18세 이상, 시민 20명 이상 연서 추천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사진, 공적 증빙자료 등이다.

길용현 기자